

2011. 2. 8

2011 다보스 포럼: ‘새로운 현실’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

고준형, 윤재호, 현석원

Executive Summary

2011 다보스 포럼: '새로운 현실'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

- 2011년 다보스 포럼은 '새로운 현실 대응을 위한 공통규범' (Shared Norms for the New Reality)을 대주제로 위기 이후 새로운 현실에 직면한 기업과 국가의 대응 및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
- 금번 포럼에서는 4대 주요 의제로 '새로운 현실에 대한 대응', '향후 경제 전망과 리스크 요인', 'G20 아젠다 지원', '글로벌 위기 대응 네트워크 구축'을 논의
 - ① 신흥국으로의 파워 이동(아프리카 잠재력 재평가) ②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③ 국제기구의 위상 약화 ④ 글로벌 리스크 발생 등 새로운 질서 형성 과정에서 국제공조 및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
 - 2011년 글로벌 경제는 비교적 낙관적이나 경제적 격차 심화,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 등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 요인 존재. 향후 3대 위험군으로 거시경제 불균형, 불법경제, 물·식량·에너지 부족 문제 지적
 -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G20의 역할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'글로벌 거버넌스 강화', '기업과 국가간의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'을 위한 G20 아젠다 제시 및 지원 촉구
 -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위기 해법 제시를 통해 견고한 글로벌 체질을 구현하기 위한 위기대응네트워크(RRN: Risk Response Network)와 같은 공동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
- 금번 포럼을 통해 G20 국제위상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G20에서 한국의 역할과 입지를 제고하고 民官공조를 통해 활용하는 노력 필요
- 글로벌 리스크의 선제적 파악 및 대응을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에 적용 가능한 글로벌 위기대응네트워크(RRN) 구축을 검토
 - 기업형 ERM(Enterprise Risk Management)와 연계할 경우 리스크 관리와 위기대응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시너지 기대



Contents

목 차

I. 2011년 다보스 포럼의 의의	1
II. 4대 주요 의제	3
1. 새로운 현실에 대한 대응	3
2. 향후 경제전망과 리스크 요인	5
3. G20 아젠다 지원	7
4. 글로벌 위기대응네트워크 구축	8
III. 시사점	9
[별첨 1] 2011 글로벌 리스크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	11
[별첨 2] 유럽 재정위기의 본질과 근원적 해결 방향	12
[별첨 3] 천연자원 부족과 환경위험	13
[별첨 4] 2011년 G20 일정	14

I. 2011년 다보스 포럼의 의의

- 금년 다보스 포럼*은 위기 이후 새로운 현실 대응을 위한 공통규범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지구촌 협력을 모색하는 장을 제공

※ 다보스 포럼: 매년 1월 WEF(World Economic Forum)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하는 포럼으로 1971년 이후 1,200여 기업과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이슈 및 아젠다를 논의

- 41회를 맞은 同 포럼(1.26~30)은 '새로운 현실 대응을 위한 공통규범 (Shared Norms for the New Reality)'을 주제로 개최

- 포럼의 주요 의제는 ① 새로운 현실 대응 ② 향후 경제전망과 리스크 요인 ③ G20 아젠다 지원 ④ 글로벌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으로 설정

※ 새로운 현실(New Reality): 금융위기 회복 과정에서 ① 경제성장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 ②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③ 선진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위상 약화 ④ 자원 위기, 인플레이와 같은 글로벌 위험요인 발생 등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을 지칭

- 2010년 포럼에서는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성장궤도로 회귀시킬 모멘텀을 찾는데 집중했다면 금년에는 새로운 질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요인을 진단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

<최근 다보스 포럼의 주제 및 논의 내용>

2008
다보스
(1.23 ~ 27)

주제: 협력적 혁신의 힘
- 세계 경제의 둔화 가능성
- 국제금융시장 위기
- 수자원 부족

2009
다보스
(1.28 ~ 2.1)

주제: 위기이후의 세계질서 개편
- 2009년 글로벌 경기동향 및 진단
-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반성
- 녹색성장

2010
다보스
(1.27 ~ 31)

주제: 더 나은 세계
- 세계경제 신중한 낙관론, 금융개혁 압력
- 글로벌 리더십 체계 변화, 쌍방향 네트워크
- 기후변화, 고실업 해결 방안, 기업 책임

- 특히, 유럽의 재정위기, 인플레이, 원자재가 향방, 환경 위험 등 새로운 리스크 요인을 선별하고 글로벌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
 -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하여 국제기구, 각국 정부 및 주요 기업들에게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
 - 광범위한 리스크에 대한 예측 방법론과 대비책을 제공하는 공동 대응 메커니즘 구축

- 이번 다보스 포럼은 세계경제의 '새로운 규범' 형성에 있어 정부나 국제기구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부문 또는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시사
 - 특히 개도국 사업에서는 교육투자, 지역 프로젝트 등 사회적 공헌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며, NGO·기업활동 등에서 얻은 노하우를 개도국 정책 수립에 전수하는 등 경제·사회적 역할까지 수행해야 할 필요성

<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의 형성 과정>



II. 4대 주요 의제

1. 새로운 현실에 대한 대응

□ 신흥국으로 권력이동과 선진국 위축 지속으로 새 질서가 형성 중

- 클라우스 슈왈 WEF 회장은 새로운 현실의 핵심요소는 정치 및 경제 권력의 중심이 西에서 東으로, 北에서 南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정의
- 신흥국 부상으로 인한 갈등은 기존 질서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불안요인을 야기
 - 중국 위안화를 비롯한 환율전쟁, 천연자원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 등 갈등이 더 커지고 있음
 - 또한 신흥국들은 국제통화기금(IMF)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에서 더 많은 지분 획득 등 영향력이 증대
- 선진국은 유럽 재정위기 지속, 보호무역주의 대두, 경기 변동성 확대 로 불확실성이 지속
- ☞ 글로벌 불안 요인에 공동 대처 위해 국제 협력 필요성이 더욱 증가

□ 특히 아시아, 남미, 나아가 아프리카로의 관심이 집중

- PWC의 글로벌 CEO 설문조사 결과 향후 1년 동안 사업이 확대될 지역으로서 아시아(90%) > 중남미(84%) > 아프리카(75%) > 중동(72%) 順
 - 국가별로는 중국(39%) > 미국(21%) > 브라질(19%) > 인도(18%)
- “앞으로 10년간은 월드컵과 올림픽을 개최하는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의 시대이며 아시아에서는 인도, 중국 뿐 아니라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, 태국이 중요해 질 전망”(세계최대 광고그룹 WPP사 소렐 회장)
- “10년안에 신흥경제국들의 경제규모가 20조 달러를 넘어서 미국보다 더 커질 전망”(인도 소프트웨어 업체 Wipro 아짐 프렘지 회장)
- “남아공,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주목해야 한다”(소렐 회장)
- ☞ 신흥국 성장과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정치·사회·경제 리스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

< 아프리카 잠재력에 대한 관심 고조 >

- **아프리카는 향후 10년간 투자와 기회의 땅으로 부각**
 - 세계 광물 자원의 30%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 공급처일 뿐 아니라 인구 10억의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블루오션 마켓
 - 소비여력이 있는 중산층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, 미개발 자원, 광활한 토지 등으로 세계 각국이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
 - ※ 중국은 성장에 필요한 아프리카 자원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대 투자자이자 아프리카 수출품의 최대 구매자로 자리매김

- **에너지, 인프라, 식량자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직접적인 투자와 교육, 위생, 일자리 창출과 같은 개발원조도 적극적 참여 촉구**
 - 태양광 발전과 같은 광역 에너지 발전기술 등은 아프리카의 전통적이고 중앙 집중식 전력공급시스템을 대체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이며 투자기회
 - 도시화에 대비한 수송·건설 및 기반시설 투자, 新 중산층 확대에 따른 내구재 소비 증가 등에 주목할 필요
 - 농업은 아프리카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고, 광활한 불모지 개간을 통한 글로벌 식량 및 바이오에너지 공급 문제 해결에 긴요
 - 종자 개량기술, 마이크로 관개술, 비료와 같은 농업관련 지원 및 투자는 식량문제 해결뿐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 일자리 제공
 - ※ 가축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에너지 개발연구 역시 탄자니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 중

- **그러나 최근 정정 불안 지속으로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**
 -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시작된 소요사태가 이웃 국가와 중동으로까지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으며 투자, 개발에 위험 요소로 등장
 - 최근 사태의 여파로 니켈가격이 상승하고 코코아 가격이 급등하는 등 자원 공급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확대

2. 향후 경제전망과 리스크 요인

□ 글로벌 경제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나 리스크 요인 존재

- 글로벌인사이드는 201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12월 3.4%에서 3.7%로 한 달만에 상향 조정
- IMF는 2011년 신흥국 성장률이 6.5% 성장하는 반면, 선진국 성장률은 2.5%로 전망하여 경기 회복 속도의 차이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

※ **Three-Speed 성장**: 기존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의 두 갈래로 나뉘던 글로벌 성장 형태가 유로존(1.5%), 미국(3.2%), 신흥국(6.5%) 세 그룹으로 나뉘어 나타나는 것을 지칭

- WSJ는 다국적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이머징 마켓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과 버블 등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고 경고

□ WEF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5개 분야 37개 요인을 선정

- 세계경제포럼(WEF)은 'Global Risks 2011'에서 경제, 지정학, 환경, 사회, 기술의 5개 분야 37개 글로벌 리스크를 제시
- 37개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발생 가능성과 예상 영향 정도로 구분

※ 'Global Risks 보고서'는 세계경제포럼이 사내 Global Agenda Council 멤버들과 전세계 580명의 지도자, 의사결정자들의 서베이를 통해 최근 나타나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을 제시한 보고서

□ 2011년 글로벌 리스크에 영향을 크게 미친 2대 요인으로 '경제적 격차'와 '글로벌 거버넌스 실패'를 지적

- (경제적 격차) 세계가 하나로 융합되지만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21세기 패러독스 발생
- (글로벌 거버넌스 실패) 국가간 이해 불일치, 동기 대립, 가치관의 차이로 글로벌 리스크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 체제 구축에 난항

□ 향후 주목되는 3대 위험군으로서 ‘거시경제 불균형’, ‘불법경제’, ‘물-식량-에너지 부족’을 제시

- ‘거시경제 불균형’은 신흥국의 통화 변동과 자산가격 버블에 영향
- ‘불법경제’는 정당한 경제활동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 발전의 기회를 위협, 국가의 빈곤과 불안정을 야기
- ‘물-식량-에너지 부족’은 세계 인구의 빠른 증가와 신흥국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자원 수요 압력 증대로 발생할 전망

< 파급 영향 정도로 분류한 2011 글로벌 리스크 요인 >

글로벌 리스크 요인	분류	영향 정도
자산가격폭락/재정위기/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글로벌 불균형과 통화변동/유동성 및 신용경색	경제	높음
지정학적 갈등/글로벌 거버넌스 실패/대량살상무기	지정학	
기후변화	환경	
경제 불균형	사회	
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/규제 실패 글로벌화 후퇴/ 중국경제 6% 이내 둔화	경제	중간
부패/불안 국가/조직 범죄	지정학	
생물 다양성 손실/홍수/폭풍 · 태풍	환경	
만성질병/인구분포 위험/식량 안보/ 전염성 질병/수자원 안보	사회	
중요 정보 인프라	기술	
소비자물가 변동성 확대/인프라 취약성	경제	낮음
불법 무역/우주 안보/테러	지정학	
대기오염/지진·화산폭발/대양 지배구조	환경	
인구 이동	사회적	
온라인 자료 및 정보 보안/신기술로부터 위협	기술	

※ 글로벌리스크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파급영향 정도는 [별첨 1] 참조

3. G20 아젠다 지원

□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G20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며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한 국제공조 및 G20 아젠다 지원 필요성이 증대

- G20은 새로운 거버넌스와 글로벌 경제 협의체로서, G8을 대체해 금번 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
- 금번 포럼은 G20을 지지할 뿐 아니라 주요 의제의 중요성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더욱 확대하는 발판을 제공하는 場이 됨
 - 2011년 G20 의장국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향후 G20의 중요성을 '당위성(ce qui doit être)'이라 표현(1.27)
- ※ 한편,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G20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공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'G-zero'라고 표현

□ 특히 G20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-국가간 상호의존적 관계를 조명할 수 있는 아젠다 개발 필요성을 강조

- G20 의제로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포괄적 성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기업-국가간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을 촉구
- 기업들이 혁신 및 고용창출 노력을 지속하고 정부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의제 발굴이 필요

□ G20 의장국 프랑스는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와 국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의제들을 제시

-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UN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제안
- 국가간 상호 협력관계 증진과 경제 불균형 문제 개선의 해법으로서 새로운 국제통화시스템 구축을 핵심의제로 제시
 - 새로운 기축통화로 '초국가적통화(Supra-Sovereignty Currency)' 제시
- 에너지 및 농산물 시장에 대한 투기규제 장치 마련과 공급체계 개선을 제시함으로써 시장내 가격변동성 리스크의 최소화 방안 논의
 - 올 6월, 농산물 가격 및 공급체계 안정을 위한 G20 농업장관 회의를 프랑스에서 개최할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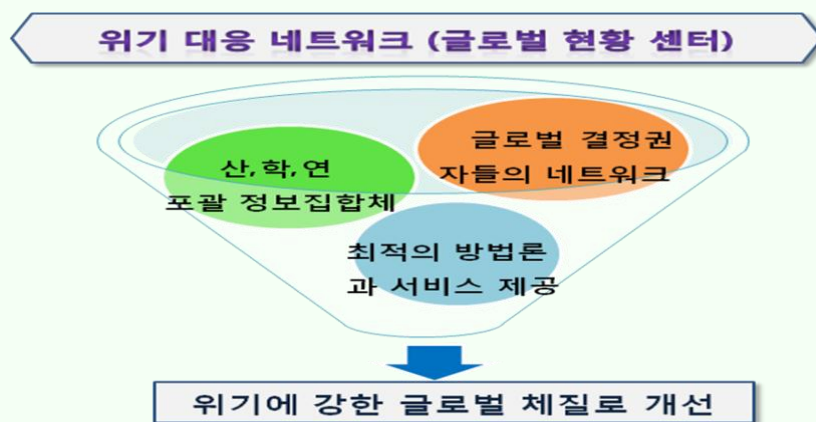
4. 글로벌 위기대응네트워크 구축

□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해 세계 유일의 통합 메커니즘인 글로벌 위기대응네트워크(RRN) 구축을 논의

- 새로운 현실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리스크 예측 능력과 통합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공동 대응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
- 민간과 공공부문 리더들에게 리스크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대비책을 제공하고 실시간 대응에 필요한 세계적 수준의 통찰력 제공

< 글로벌 위기대응네트워크(RRN) >

2011 다보스 포럼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위기대응 네트워크의 실체로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정보 제공과 위기 해법 제시를 통한 견고한 글로벌 체질 구현을 목표



- 산-학-연을 포괄하는 정보집합체: 다보스 포럼內 Global Agenda Council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대학 및 민간부문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최상의 정보를 제공
- 정부-기업 등 글로벌 결정권자(decision-makers)들의 네트워크: 국제기구, 각국 정부,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리스크 위원회 구성
- 최적의 방법론과 서비스 제공: 개별적이고 상황에 맞는 리스크 분석 및 관리 절차를 구축, 글로벌 리더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대응력을 제고

III. 시사점

□ 글로벌 경제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에 대비한 전략 수립과 동시에 글로벌 잠재 리스크의 선제적 파악 필요

- 신흥시장 고성장 및 선진국 조기회복 시 원자재가 추가상승에 대비하면서 아프리카, 인니 등 신흥 개도국의 정치·경제적 리스크를 점검
- 국내외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. 특히 지속되고 있는 유럽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환율 등 주요 금융변수에 대한 위험 최소화 방안을 강구

□ 향후 G20 역할 및 국제위상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상회의 및 비즈니스 정상회의를 통한 한국의 역할과 입지를 제고하고 民官 공조를 통해 활용하는 노력 필요

- 참신한 G20 아젠다의 개발과 구속력 있는 실천 방안 제시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일조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
- 각국 기업들의 인프라·천연자원에 대한 투자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정상회의 전후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투자 기회를 적극 창출

□ 기후변화·자연재해 등 환경위험과 식량·원료·에너지 등 천연자원 부족 대책을 점검하고 원자재발 인플레이의 대응방안 강구

- 해외 투자기업의 경우 이상 기후 빈발에 대비해 재해보험 확대와 날씨 파생상품 등 헤지 수단 사용을 검토해 볼 필요
- 최근 당초보다 빠른 조기 경기회복 기대와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원자재 인플레이에 대해서도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
- 더욱이 중장기적으로 물·식량·에너지 등 자원 부족에 따른 원자재 대란 및 안보위협 등에도 체계적인 준비 필요

□ 다보스에서 제시한 위기대응 통합 메커니즘인 **RRN**을 정부와 민간부문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국내외 광범위한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활용

- 기업형 ERM(Enterprise Risk Management)와 연계할 경우 리스크 관리와 위기대응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시너지 기대

□ 새롭게 주목 받는 아프리카의 잠재력 재평가로 농업·인프라·에너지·자원개발 분야에서 民官의 적극적 투자 진출 필요

- 첨단기술과 자본을 결합하여 식량자원, 바이오 에너지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지역과 방안 구상
- 태양광 발전과 같이 분산되고 광활한 지역에서 효율적인 그린 power를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의 투자도 고려
- 도로, 철도 등 수송 인프라·수력자원개발·자원 탐사는 물론 신도시 건설, 아프리카 新중산층 공략 등 다양한 기회 요인 발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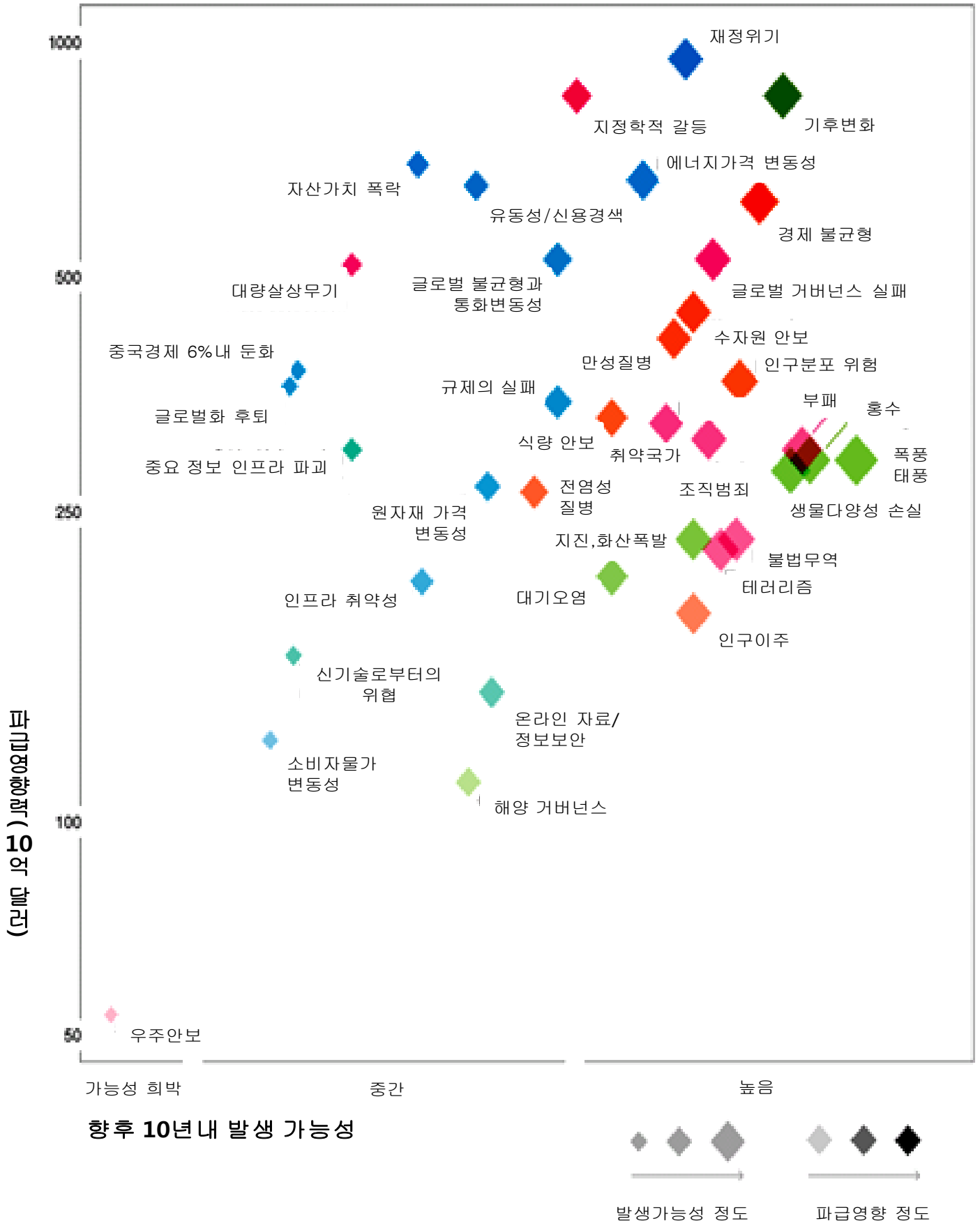
고준형 (Tel: 02-3457-8262, e-mail: jgoh@posri.re.kr)

윤재호 (Tel: 02-3457-8228, e-mail: jhyoon@posri.re.kr)

현석원 (Tel: 02-3457-8092, e-mail: kyotohyun@posri.re.kr)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.

[별첨 1] 2011 글로벌 리스크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



[별첨 2] 유럽 재정위기의 본질과 근원적 해결 방향

- 프랑스, 독일 등 유로존 중심국가들은 유로존 위기 극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
 - 1.25일 50억 유로에 달하는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의 첫 채권 발행에 성공
 - 프랑스 재무장관은 “채권청약액이 발행액수의 9배에 달했다는 것은 시장 신뢰를 나타내는 지표이자 유로존이 위기의 모퉁이를 돌았다는 것을 의미한다”고 지적
 - 독일 재무장관은 “유로존 국가들에 더 이상 큰 위기는 없을 것이며 회원국들이 이번 위기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”고 긍정적으로 전망
-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여전
 - 유로존 주변국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포르투갈, 스페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가능성 제기
 - 소로스 회장은 유로존이 회원국의 경제성장 양극화에 따라 분열될 수 있다고 경고
 - 블룸버그 통신 설문조사 결과, 향후 5년 내에 유로존을 탈퇴하는 회원국이 적어도 1개 이상 발생할 것으로 59%가 응답
- 향후 유로존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 부채 축소 노력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 개혁 필요
 -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유럽 국가들이 세금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와 재정지출을 축소함으로써 대대적인 국가 부채 감축 요구
 - ※ 그리스의 경우, 유럽 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재정목표를 달성해도 공공부채가 여전히 경제 회복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
 - 취리히파이낸셜 호프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“현재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재정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. 구조적 수정 없이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크다”고 언급

[별첨 3] 천연자원 부족과 환경위험

- 물, 식량, 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가 원자재·곡물價 변동성을 확대시켜 글로벌 인플레이 및 중동·아프리카 소요사태를 초래
 - 최근 호주의 기록적인 폭우로 철광석 생산지역이 침수되어 국제 철광석價가 상승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자재價 변동성 확대
 - 알제리, 이집트에서는 지난 해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옥수수, 밀 등의 가격이 급등해 소요사태 발생 및 정권퇴진 운동 확산
 - 원자재·곡물價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는 상품시장 규제강화, 대체 에너지원 및 광물자원 발굴, 신규 매장지 탐사, 농업기술 향상 및 인적자원 투자 확대 등 생산량 확대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
- 따라서 자연재해 위기 대응에 있어 기업의 역할 확대 촉구
 - 물품·자금 기부에 그쳐왔던 기업의 재해대응 활동을 물류, 경영관리 등 기업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
- 한편,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을 강조
 - 중국의 수요 급증으로 석탄 등 화석연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정 에너지는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투자가 부진
 - 스마트 그리드,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이 필요하며, 장기적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
- 이 밖에 식량안보, 기후변화,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해양환경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
 - 전세계 GDP의 절반에 이르는 US\$31조가 해양자원에서부터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부족
 - 어족자원 고갈,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산성화와 해양생태계 파괴,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주민생존 위협, 조업활동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

[별첨 4] 2011년 G20 일정

일자	내용	장소
1.30일	G20 개발 아젠다 논의(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)	에디오피아
2.18일	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 총재회의	프랑스 파리
3월 중	中·佛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세미나(G20 의제)	중국 도시(미정)
4.14일	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 총재회의	미국 워싱턴
5.26일	G8 정상회의	프랑스 도빌
6월 중	G20 농업장관회의	프랑스 도시(미정)
10.14일	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 총재회의	프랑스 도시(미정)
11.2일	G20 정상회의	프랑스 칸 (당초 파리에서 변경)